

중장년의 실질적인 퇴직서비스가 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4.29.(화), 동아일보 “퇴직자(50세 이상) 재취업 지원 의무화에도…비용 부담에 기업 60%만 참여”

2. 설명 내용

- '20.5월부터 1,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*를 이직(예정)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

* 진로, 생애경력설계, 취업알선, 교육훈련 등

- 그동안 ①기업 비용부담, ②퇴직대상으로 낙인 등의 이유로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

*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률: ('19) 19.5% → ('22) 59.8%

- 정부는 매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, 의무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이행 담보 수단 부재 등으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음
- 이에 중장년층 퇴직예정자가 원하는 일자리로 이·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신설, 40대부터 경력설계와 연계한 재취업 서비스 제공 등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영범 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2-7461)